

# 빛내서 성장한 경제... 자산 버블의 끝은 '장기 불황'

## 민스키 모멘트 시작되나 (버블붕괴 예고 경제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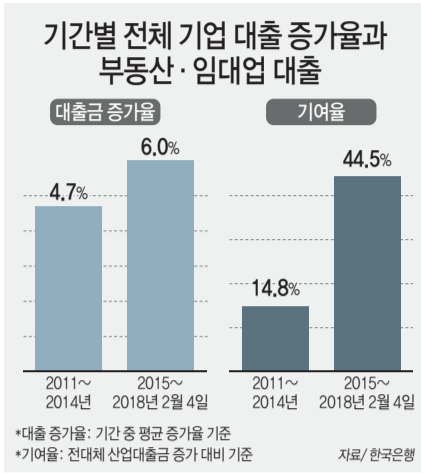
### 잃어버린 20년의 교훈

가계부채 수준 높고 증가폭도 커  
버블 경고 울려... 구조조정 적기

정부의 공격적인 금리인하에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폭등했다. 금리인상과 부동산 관련 대출을 억제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가계는 빛에 허덕이며 소비를 줄였고,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에 빠졌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재정만 악화시켰다.

자산버블을 막아라. 일본의 장기불황,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의 교훈이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20년의 장기불황을 견딜 대규모 내수시장도, 탄탄한 자본력도 없다. '민스키 모멘트'가 오기 전에 자산버블에 대한 경고등이 더 크게 울려야 하는 이유다.



11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 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올해 2분기 98.7% 수준으로 상승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수준 자체가 매우 높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증가 폭도 크다"며 "가계 신용순환을 보더라도 2014년 이후 확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과정에

서 가계부채도 가파른 속도로 불어났다. 특히 서울 지역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의 상관관계가 높고, 전국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았다. 지난 7월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의 지역별 비중은 서울 29.3%, 경기 24.7%, 6대 광역시 22.6%, 기타 23.5%로 집계됐다.

기업대출 측면에서도 부동산 관련 대출이 크게 늘었다.

전체 기업대출 증가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기여율은 2011년~2014년 14.8%에서 2015년~2018년 2분기 44.5%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부동산·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말 33.1%에서 2018년 2분기 말 38.6%로 꾸준히 올랐다.

한은은 "그동안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큰 폭 상승하고 기업 신용 중 부동산 및 임대업 관련 대출도 크게 증가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됐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통화정책 운영 시 금융 안정에 대해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빛으로 끌어올린 가격이라도 계속 올라가지만 한다면 상관이 없다. 문제는 가격 거품이 빠지면서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집을 보유한 가계를 생각해 보자. 집을 구입할 때 6억원의 빚과 4억원의 순자산 투입했다. 집값이 반토막이 나면서 이 가계의 순자산이 모두 날아간 것은 물론 집을 경매에 넘기기도 쉽지 못한 1억원의 빚은 그대로 남게 된다.

위기 상황은 이 가계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집도 없고 빚만 남은 가계는 소비를 극도로 줄여야 하고, 기업들의 매출은 가파르게 곤두박질 친다. 고용은 줄고 가계소득은 더 낮아지는 불황의 악순환이 시작된다.

이미 국내 부동산 가격에 대한 거품 경고등은 울렸다.

보험연구원 윤성훈 선임연구원은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변동성 추이를 비교한 결과 한강 이남의 아파트의 경우 거품 조짐에 들어섰고, 한강 이북 지역도 거품 수준에 근접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거품이 꺼질 때 정도가 과도할 경우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도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나설 적기라는 의견도 나온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가계부채 발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면서 현 단계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 주도의 가계부채 구조조정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동산 시장이 조정국면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투자 심리는 양호한 상황으로 대다수 과다 채무 다주택자의 순자산이 플러스인 현 시점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 연구원은 "가계부채 부실화의 핵심 주체는 취약채주가 아니라 과다 차입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한 채주로 구조조정 시기를 놓칠 경우 구조조정 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자산시장, 나아가 전체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1@metroseoul.co.kr

# IMO 황산화물 규제에... LNG 강국 국내 조선사 수주 청신호

## 글로벌 선사, 대책으로 스크러버 장착 국내 조선사는 LNG추진선으로 교체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규제로 글로벌 대형선사들이 스크러버(황산화물 세정장치)를 채용하고 있는 반면, 국내 조선사들은 비용 부담이 덜하다는 이유로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수주에 눈을 돌리고 있다.

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형선사들은 운송 선박에 스크러버를 채용하

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 선사인 젠코쉬핑앤드트레이딩은 케이프 사이즈 벌크선 17척에 스크러버를 장착했다.

세계 최대 해운업체인 덴마크 머스크도 일부 선박에 스크러버를 시험 장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덴마크의 경우 선박 배기 추적기술을 활용해 규제를 위반하는 선박에 대해 4600달러에서 1만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3만667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황산화물 규제 위반에 따른 최대 벌금금액은 5만7500달러

다. 경우에 따라서 선박구금이나 입항금지 등의 벌칙을 내리기도 한다.

해운사들은 IMO 황산화물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존 배에 스크러버를 부착하거나 저유황유로 연료를 바꿔야 한다. IMO의 황산화물 규제는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은 이 환경규제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그러나 해운사들이 연료를 저유황유로 바꾸게 되면 연료비가 벙커C유 대비

50% 이상 증가하게 된다. 스크러버 장착 비용은 배 한 척당 60억~100억원이상이다. 스크러버 사용으로 선체 내부 등이 변질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엔트워프, 로테르담 등 유럽의 주요 항구에서는 스크러버를 장착한 배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파이프나 선체 내부에 심각한 부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국내 조선사들은 LNG추진선과 벙커링선 인도를 시작했다. 비용부담이 큰 스크러버나 저유황유 보다는 선박을

LNG추진선으로 교체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LNG연료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LNG추진선 투자가 늘어날수록 LNG연료탱크 사업 성장성이 부각될 것이며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3사에게는 중국 조선사들과 격차를 벌릴 좋은 기회다. 조선3사끼리는 기술력에 차이가 크지 않지만 중국 조선사들과 비교하면 국내 기술력이 크게 앞서기 때문이다.

한편 순수한 화물선 중에서 LNG추진선 수주 실적은 현재 현대중공업이 18척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삼성중공업은 10척, 대우조선해양은 아직 실적이 없다.

/정영우 기자 yw964@

## 수정·보완 내용을 학교 현장에 빠르게 전달합니다.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

수정·보완 사항에 대한 전문적 검토, 수정·보완 업무 내실화 및 시스템 개선, 수정·보완 시스템 지원 체제 확립으로 교과용도서의 질을 제고합니다.

교과용도서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교과용도서 질을 제고하고, 교실 수업을 지원하며,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이용방법

www.textbook.or.kr

1566-8572 (T105 상담전화)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Textbook Information One-stop Service